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포럼 **2차**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2021. 4. 28. (수) 15: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5층)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포럼
2차: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PROGRAM

1. 개최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5:00~

2. 개최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5층), ZOOM 화상회의

- 회의명: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2차 포럼
- 접속가능시간: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2시 40분 이후 접속 가능
- 회의ID: 987 3283 5461
- 접속PW: 3434
- 회의링크: <https://zoom.us/j/98732835461?pwd=bW9mL3NHZzNHekdIVU9jSGVsSaXp4Zz09>

3.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 주요 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제도 설계 시 정치 및 경제 구조 고려 방안
- 발표자: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포럼 진행 일정(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4:30~15:00 (30')	행사 등록	Zoom 사전 접속
15:00~15:10 (10')	개회	사회자: 신윤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0~15:50 (40')	발표	[발표]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 좌장: 신윤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자: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50~16:00 (10')	휴식	-
16:00~16:50 (50')	토론	좌장: 신윤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최슬기 교수(KDI School)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16:50~17:00 (10')	폐회	-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포럼
2차: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CONTENTS

[발 표]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1

– 발표자: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15

– 토론자 : 최슬기 교수(KDI School)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포럼 2차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 발표자: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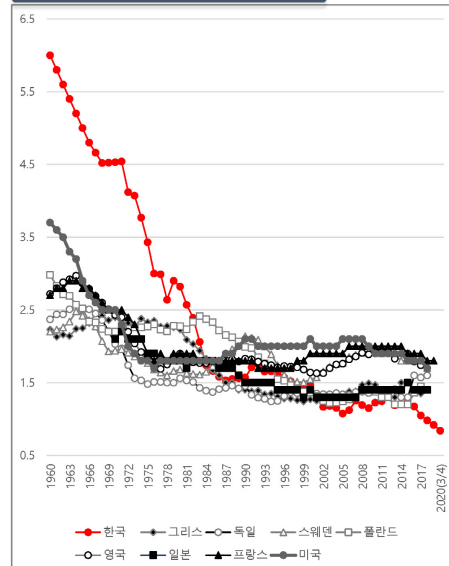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1

문제제기:
왜 정치-경제적 접근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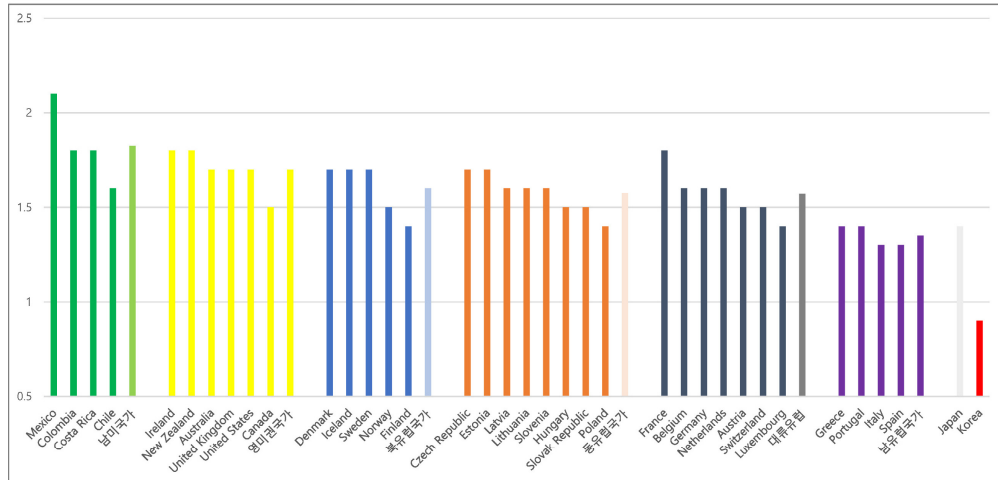
-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의미**
-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삶의 질 개선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을 둔화도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축소)(Vollrath, 2021).
- 그러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구(old)접근방법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 더욱이 한국 사회의 인구문제는 선진국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그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임.
- 구접근방법과 같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다시 말해, **문제의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건복지정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함.
-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응은 정치경제적 접근이 불가피함.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의미 있는 정책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2017년 12월 저출산 대응정책을 삶의 질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접근은 불가피함.

한국과 OECD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1960-2020



왜, 한국만?
인구학적 특성만으
로는 설명불가
(만혼, 늦은 출산, 여
성의 사회참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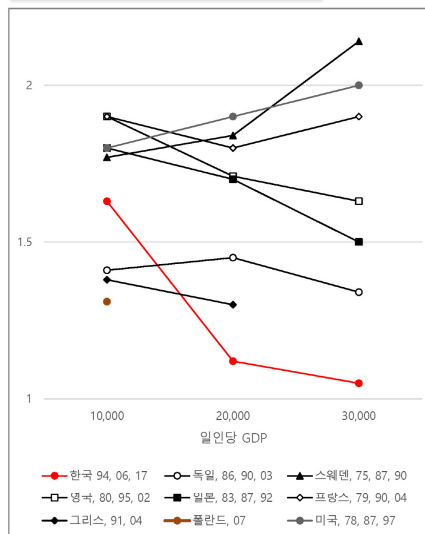
OECD 국가 복지제도와 합계출산율, 2019 (또는 최신)



자료: OECD (2021),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2 Apri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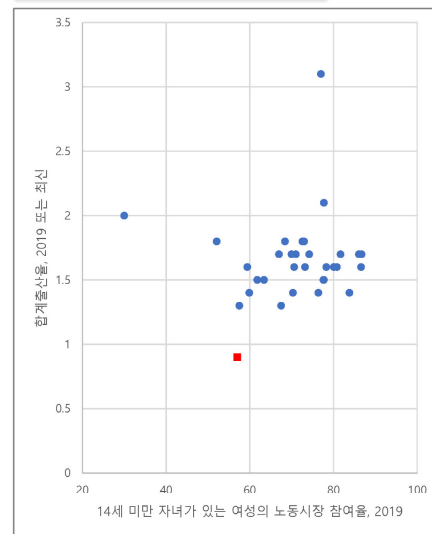
왜, 한국만?
인구학적 특성만으
로는 설명불가
(만혼, 늦은 출산, 여
성의 사회참여 등)

일인당 GDP와 합계출산율, 1만 불~3만 불



자료: The World Bank. 2021. GDP per capita(current US\$). OECD (2021),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2 Apri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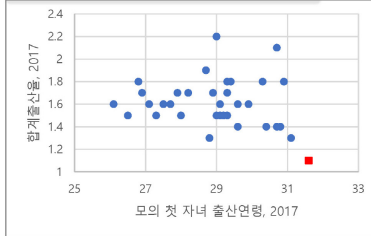
한국과 OECD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196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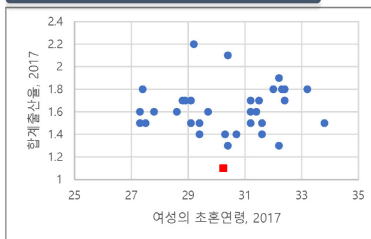
자료: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2 April 2021). OECD. 2021. Family database. Maternal employment.

왜, 한국만?
인구학적 특성만으
로는 설명불가
(만혼, 늦은 출산, 여
성의 사회참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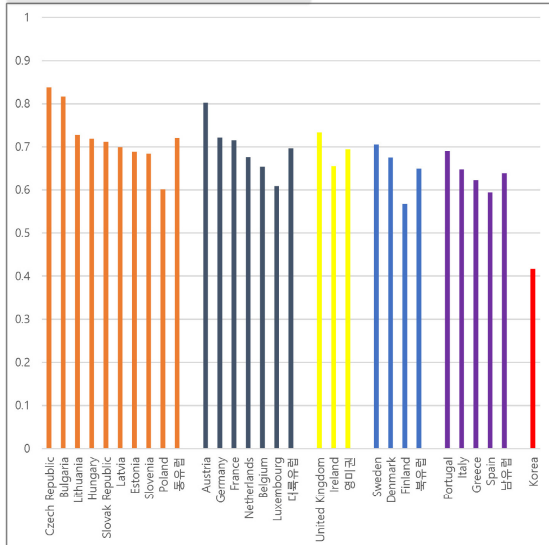
합계출산율과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2017)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초혼연령(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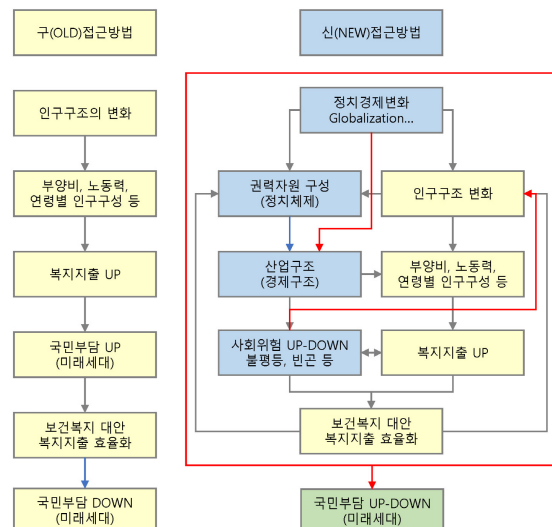
이상 자녀 수 대비 합계출산율 비율(1.0=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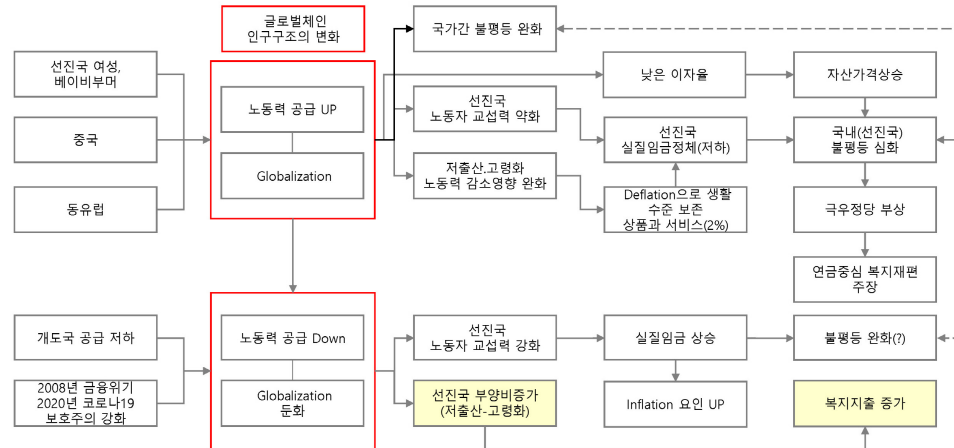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2 April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연령별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8C2809N
OECD, 2021, Family database: Ideal and actual number of children.

미래인구 문제, 어
떻게 접근할 것인가?
경제정책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의미
-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성공적인 산업화의 결과이며, 경제성장을 둔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 (Vollrath, 2021). 그러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과거와 같이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고도성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더욱이 한국의 인구문제는 선진국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그 특수성을 규명하는 작업이어야 함.
- 이렇게 보면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구(old)접근방식만으로는 한국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
- 구접근방법과 같이 문제의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건복지정책이 아니라 문제의 정치경제적 원인에 대한 대응의 프레임에서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의미 있는 정책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2017년 12월 저출산 대응정책을 삶의 질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접근은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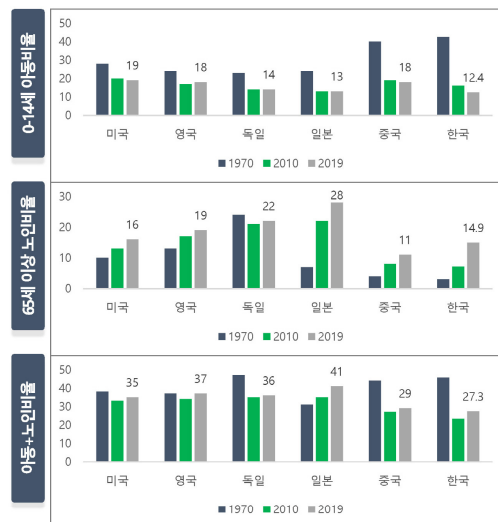


- **글로벌 노동공급 구조의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풍부한 잉여노동력에 의존했던 상품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함(Goodhart and Pradhan, 2020). 이는 더 이상 디플레이션과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inflation 가능성 높아짐).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압박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개도국의 값싼 젊은 노동력에 상품생산을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재정측면에서도 낮은 (성장을 보다) 낮은 이자율에 의존하는 국가채무 증가를 통한 대응이 점차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 즉, 개도국의 잉여노동력 없이 국민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구조와 복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공급증가,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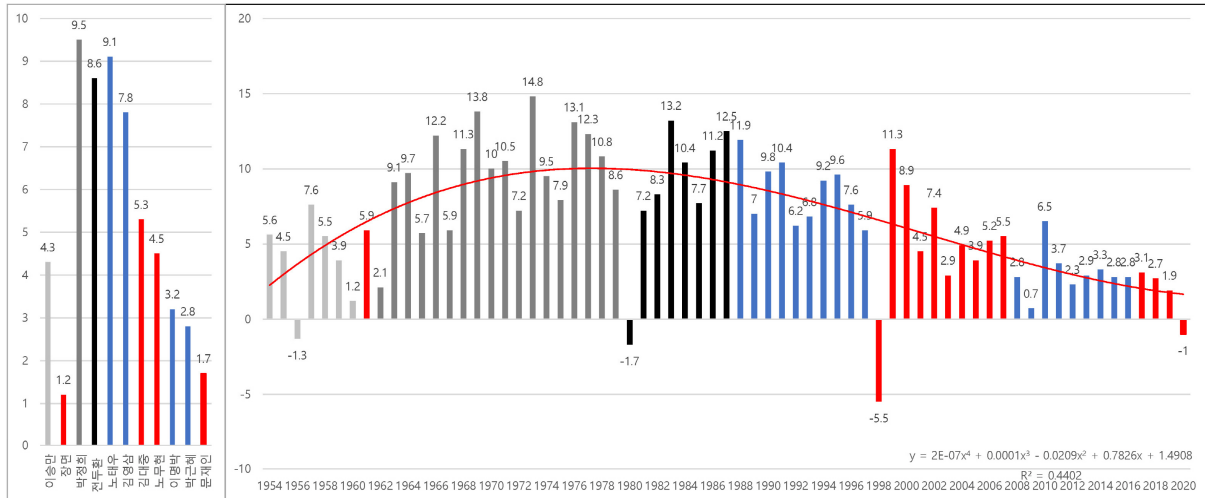
- 중국이 세계무역체계에 편입되면서 대략 2억4천만의 생산인구 증가. 1990-2018. 서유럽과 미국의 노동인구 증가분(6천만)의 4배에 해당. 여기에 소련의 붕괴로 1990년대부터 동유럽 노동력 세계무역체계에 편입(Goodhart and Pradhan, 2020).
- 선진국의 인구구조의 변화, 부양비율의 감소(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결과)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이로 인해 엄청난 노동공급증가.
- 지난 1990-2018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예외적인 시기.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가 끝나가고 있고 노동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인구보다 소비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세계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아프리카 등에서 신규 노동력이 유입될 가능성 상존.
-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간 글로벌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미래 인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한국은 아동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노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



자료: Goodhart, C. and Pradhan, M. 2020.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London: Palgrave Macmillan. 통계청. 2019. 인구조보는 대한민국: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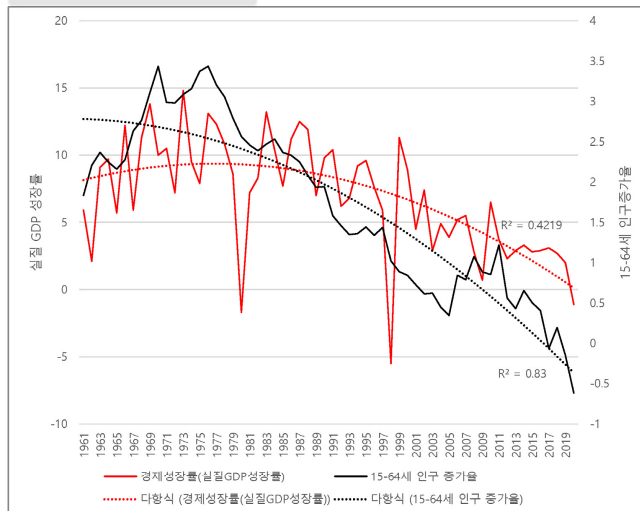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의 일상화:

더 이상의 자본과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의 기적은 없다
성장을 둔화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결과
성장을 통한 안정 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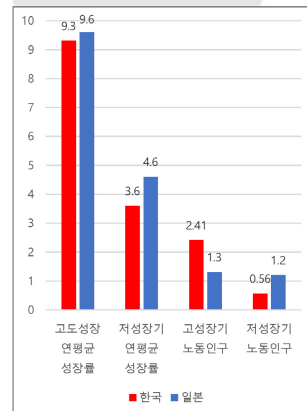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의 일상화:
인구증가율의 둔화
와 성장률의 둔화
혁신?

GDP 성장률과 인구성장률, 196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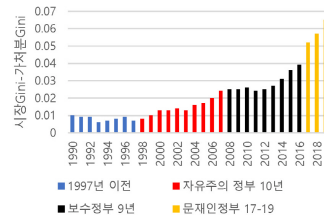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 실질 GDP 성장률과 노동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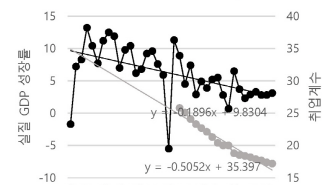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의 일상화:
개발국가 복지제
의 해체와 대안의
부재. 사회위협 증
대

정권 별 지니 계수 감소분(P),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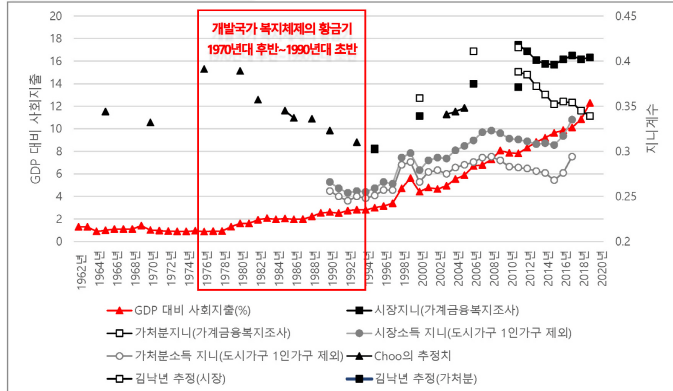


조세와 사회지출의 지니 계수
완화 효과(2015)



다음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한국고용정보원. (2018). 통
계로 보는 노동시장: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https://statistics.keis.or.kr> (접근일, 2018. 5. 1).

GDP 대비 사회지출과 불평등(지니 계수),
196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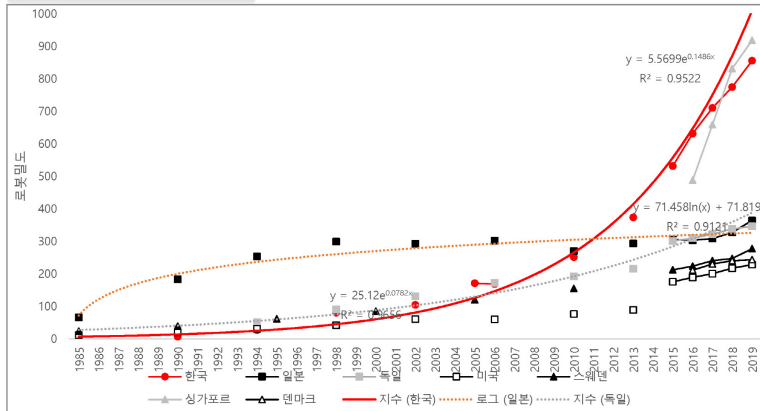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2018년 2분까지 지니계수). Kwack, S. Y. and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김연명(2015), 신동민 (2011:31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주의: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통계연보에서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복지예산을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러한 산출방식은 신동민이 산출한 1962년부터 1979년까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과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과는 그 산출방식이 상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만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2-1979년간 OECD 지출 통계는 김연명(2015)의 발표문을 참고했다. 통계청. (2018). e-나라지표: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12&board_cd=INDX_001 (접근일, 2019. 3. 23). 김낙년-김충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Choo, H. J.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인구문제를 심화 시
키는 경제체제(성장체
제)

자동화 vs. 노동 숙련

- 한국의 급격한 자동화와 독일, 스웨덴 등의 완만한 자동화(노동 숙련을 동반한 자동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벌 대기업의 탄생과 성장,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균열.
- 노동숙련을 대신하는 급격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노동 숙련에 기초한 숙련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 진보진영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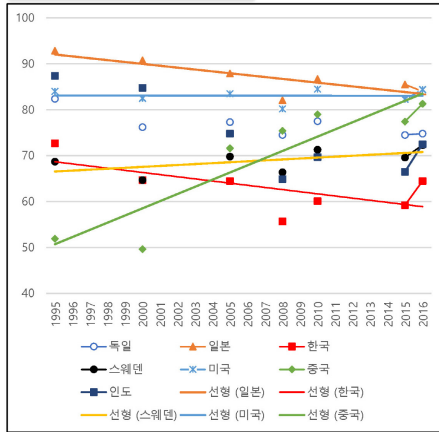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밀도의 변화,
1985-2019



출처: Statista. 2020. Manufacturing industry-related robot density in selected countries worldwide in 2019(in units per 10,000 employe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11938/industrial-robot-density-by-country/> (접근일, 2020. 11. 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8). Robot density rises globally. The RobotReport. 2019. US robot density ranks 7th in the world. April 5, 2019. <https://www.therobotreport.com/us-robot-density-ranks-7th-in-the-worl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9. IFR Press Conference 18th September 2019, Shanghai. <https://ifr.org/downloads/press2018/IFR%20World%20Robotics%20Presentation%20-%2018%20Sept%20201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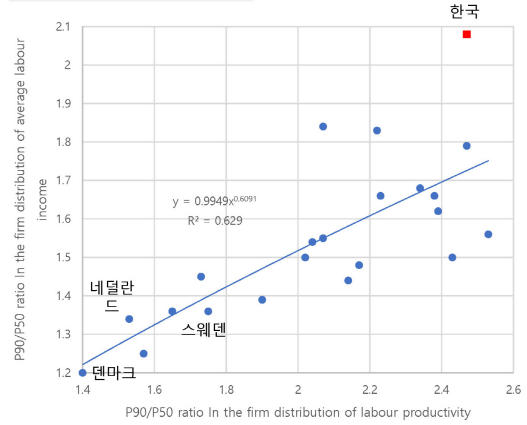
인구문제를 심화 시키는 경제체제(성장체제). 나쁜 일자리의 양산

제조업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 1995-2016



Source: OECD TIVA Indicators: 2018 edition, 장준호, (2018), "제2장 경제적 유산과 정점", 유종식 외,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pp. 11-57.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9차 자료. 를 그래프로 수정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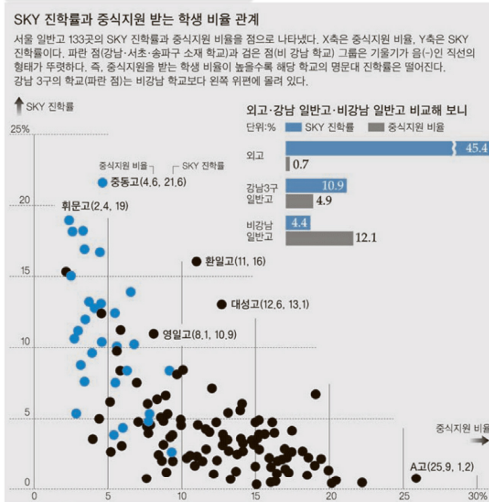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격차



Source: OECD (2016c), "Promoting Productivity and Equality: Twin Challenges", OECD Economic Outlook, No.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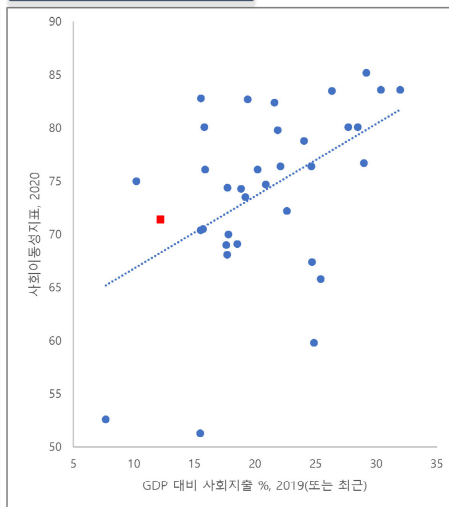
사회위험의 증대: 부의 세습, 세습되는 불평등

일반고와 비일반고, 강남과 비강남 고등학교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



출처: 중앙일보 2012 개천서 용 날 수 없다, SKY진학을 비교해보니* 201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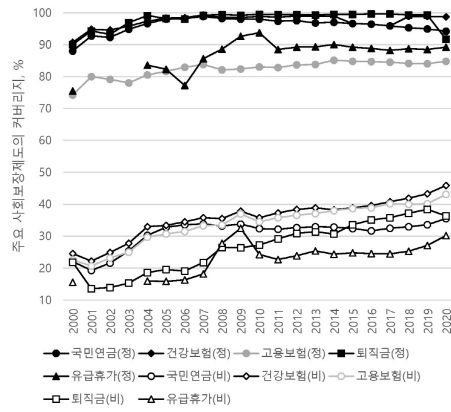
GDP 대비 사회지출과 사회이동성



WEP, 2020. The Global Social Mobility Report 2020: Equality, opportunity, and a new economic imperative. WEP.

사회위험의 증대: 복지체제, 역진적 선별성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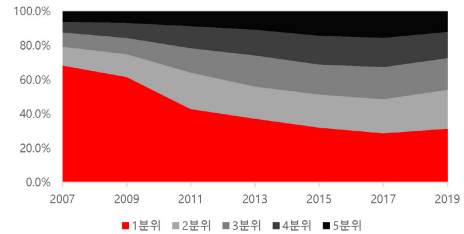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주요
보장제도 차이, 2000-2020



김유선 (각년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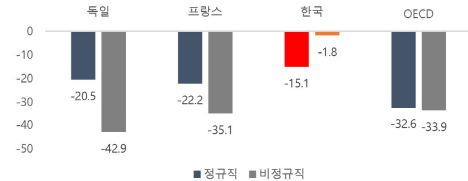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2012),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2012), 한국노동패널조사(KLPS 2009,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2010) for Canada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and Inequality Benefits At 전병우 편, 2016 한국 불평등 2016 서울 페이퍼북 p.171, 재인용. (오른쪽 그림)

전체 공적이전소득 대비 소득분위별
점유율, 2007-2019



출처: 윤홍식, 이종권 (2021).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출간준비자료)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조세 및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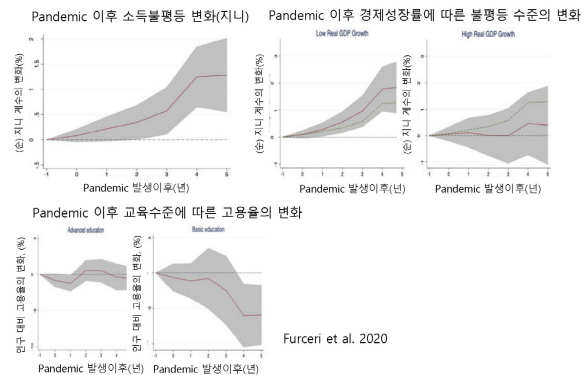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회위험의 심화: 불평등의 확대

고강도 방역과 희생의 계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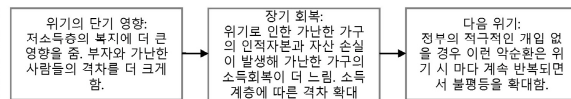
- 고강도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지 못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우려했던 것처럼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위기가 중산층에게도 확산되는 상황으로 판단됨.
- 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은 이미 IMF를 포함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임.
-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과 같은 일회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고 제도개혁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개혁은 미진함.
- 문제는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은 강력한 지도자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친화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상존.

Pandemic 이후 불평등



Furceri et al. 2020

불평등과 위기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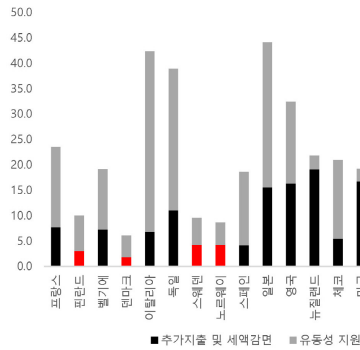


World Bank, 2021.

코로나19 복지국가의 실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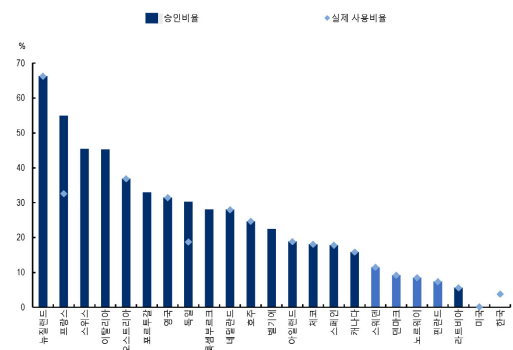
복유립 복지국가는
왜, 자원에 인색했
을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확진자, 성장률, 국가부채



IMF, 2021.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취업자 중 고용유지 프로그램 승인사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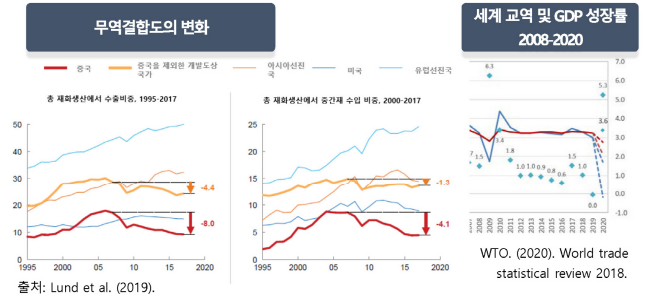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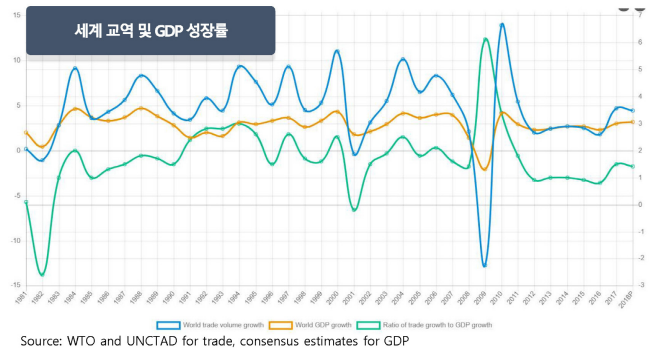


Note: Data refer to end May except for Luxembourg and Switzerland (end April). Data for Austria, Finland and Norway refer to the number of registered persons in job retention schemes at the end of May. Data for Belgium refer to the estimated number of approved applications in May. Data for Ireland and Spain refer to the number of recipients in May. Data for Canada cover the period from 10 May to 6 June. Data for France and Germany on actual use are the estimated number of persons in job retention schemes in May. United States: data refer to participation in short-time compensation schemes. Australia, Canada, Ireland, the Netherlands and New Zealand operate wage subsidy schemes, which are not conditional on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see Section 1.3.2). Take-up rates ar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dependent employees in 2019 Q4. 이창근(2021).

패러다임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약화,
거시경제정책의 변
화
복지국가의 역할 확
대

- 세계화에도 일정 수준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Rapoza, 2020). 필수적인 보건의료부문의 자유무역은 국제공조를 통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생산과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교역의 감소는 불가피함.
- 물론 세계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The Wall Street Journal, 2020). 세계경제포럼, 탈-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 (제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교역은 약화(리쇼어링, 니얼쇼어링)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의 취약성 증대. 한국이 과거와 같이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
-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국가가 주권-민주주의-글로벌라이제이션의 트릴레마로부터의 탈출 가능(Rodrik, 2011).
-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국제적 조건 성립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우호적 조건 형성.



패러다임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약화,
거시경제정책의 변
화
복지국가의 역할 확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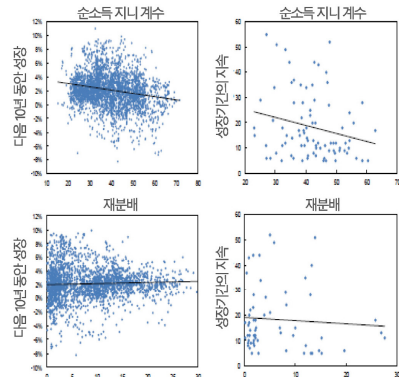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국제 동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목표가 **성장**에서 **지속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장의 목표도 '평균소득'에서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전환. 거시경제의 강조점,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에서 **고용과 임금**으로 전환
- **사회정책의 위상 변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용'에서 경제정책과 함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동인'으로 위상 변화
- 불평등이 해소가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소득불평등에서 자산, 성 불평등으로 정책 영역 확장.
- 국가가 다시 안정적 고용을 보장(지원)하는 정책추진(코로나19 국면에서 확인). **복지국가의 역할이 소득보장과 서비스 제공에서 다시 고용보장으로 확대**(40년 만에 패러다임 전환).

■ IMF

- **워싱턴 합의의 실패를 인정하는 IMF의 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에서 고용과 임금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
- IMF는 2008년 금융위기, 2009~10 유럽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거시경제 입장에서 후퇴하기 시작. 2016년 이후, 기존 입장 오류 인정
- 증거기반정책에 입각해 지난 30년을 반성하고, 정책의 초점을 불평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
- 핵심은 불평등 완화 없이 지속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역할 강조. 특히 최근에는 **성 불평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아감
- 2020년 10월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회합, 인축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평가(Financial Times, 2020)
- Inflation을 유발하지 않는 선까지 확장적 재정정책(부채+증세모색-디지털세, 최저법인세)

● 불평등과 지속성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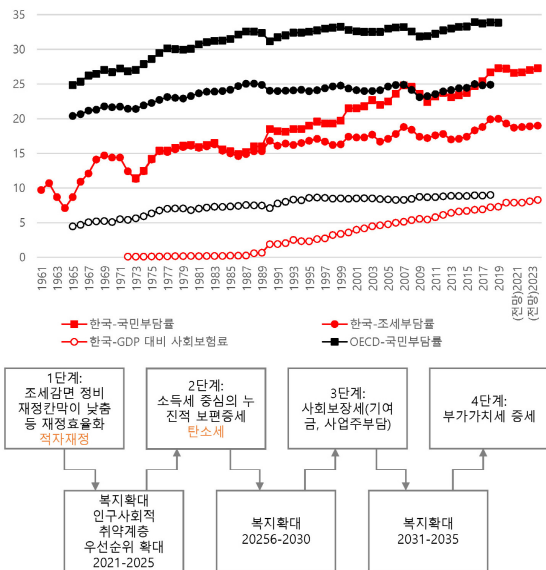


출처: Ostry et al.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SDN/14/02. IMF.

복지국가의 전환
재원
20년 4단계 증세전략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높이는 선택과 증세라는 선택지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7% 기본소득 도입에도 58.5%가 찬성했지만, 증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8%, 복지확대를 전제로한 재정 확대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6%에 이릅니다(한겨레, 2020. 6. 24).
- 실제로 2021년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못하는 점 중 세금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어 두 번째(14.3%)(한겨레, 2021. 1. 1).
- 위기 국면에서 지원에 대한 높은 지지와 증세에 대한 강한 반대가 공존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임.
- 이번 대선에서도 일부 진보진영에서 증세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증세는 충수요를 축소시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증세는 경제회복 이후의 과제로 넘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 결국 대안은 국가부채 확대를 통한 **선-복지확대 후-단계별 누진적 보편증세**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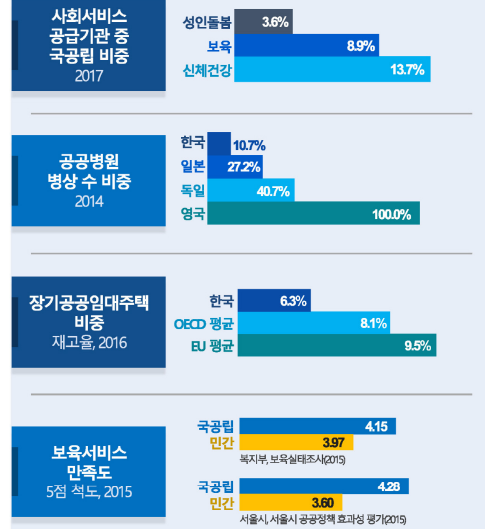
GDP 대비 한국과 OECD 조세, 국민부담률
20년, 4단계 증세전략



복지국가의 전환 재원 공적 사회서비스의 강 화

국가를 대신한 민간: 약화된 공공성

-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 체제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를 고착화 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취약하게 제도화함.
- 아동, 노인 등 돌봄 서비스, 건강관련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임.
- 돌봄 및 건강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반해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모순적인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음.
- 실제로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시 가계 부담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시 보다 높음(예, 상급종합병원-보장률 공공 64.4%vs. 60.9%).
- 전체 사회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공공부분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대안 중 하나는 양질의 공적 사회서비스의 강화임. 북서유럽과 미국의 대립되는 사례를 이를 경험적으로 논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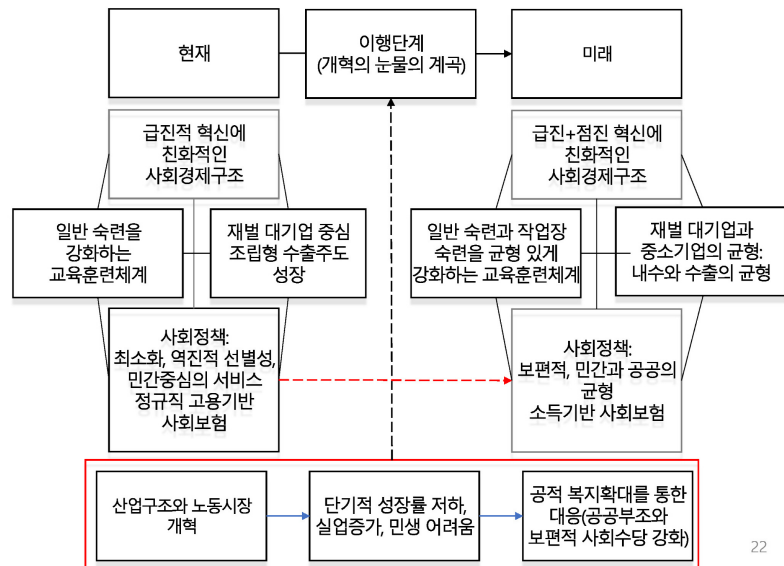


출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018. 11. 23. 청와대.

성장체제의 개혁, 인구구조를 변화시킬 대안이자, 변화된 인구구조가 야기한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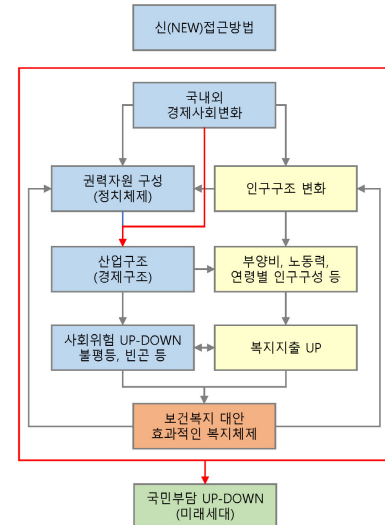
성장체제의 개혁 없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불가

-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이 발제문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이 잘해왔던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을 찾는 것임.
- 수출과 내수,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성하는 것임.
-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요구됨.



결론

- 어렵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의 시도
- 현재 한국의 경제, 복지구조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유발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구조가 아님. 더욱이 보건복지 영역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의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단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는 상수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변수라는 인식에 기초해 정치경제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원 배분이란 결국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우리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적 보건복지대안, 즉 효과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됨.
- 국민부담, 특히 미래의 국민부담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여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정치경제, 복지체제의 전체적인 구조하에서 결정되는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구조의 모습도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 복지체제의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제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감사합니다

토론

- 토론자: 최슬기 교수(KDI School)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